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35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신한투자증권(주)
임 원	■■■(前 대표이사)
직 원	

2. 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조치	
	원안	수정안
신한투자증권(주)	과태료 50백만원	좌 동
前 대표이사 ■■■	조치생략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(직무정지 1.5월 상당 추가)

☐ (수정의결 사유) 前 대표이사 ■■■이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으로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 조치를 받은 것과 별도로 「지배구조법」 위반만으로도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 조치가 가능하고, 각각의 행위로 두 법률 관련 조항을 각각 위반(실체적 경합)한 만큼 수 개의 위반사항을 함께 조치하였다면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4.5월 상당) 수준의 양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既 조치 수준과의 차이인 직무정지 1.5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,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☐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*을 마련하여야 하고,

*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

-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
- 신한투자증권(주)는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·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가.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(1) 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

- ◇◇◇◇◇◇◇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, 동 업무가 ◇◇◇◇◇◇ 총수익의 xx% 이상*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

* 20xx년(xx.x%) → 20xx년(xx.x%) → 20xx년(xx.x%)

- 신한투자증권(주)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
- △△ ▣▣▣▣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■■■■ ■■■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◇◇◇◇◇◇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

(2)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

- 신한투자증권(주)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(Official)*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(Un-official)**도 허용하고 있으므로

* ◇◇◇◇◇◇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

**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

-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

- ◇◇◇◇◇◇◇가 20xx.x월~20xx.x월 기간 중 ○○○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△△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

나. 금융투자상품 출시·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(1)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

-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,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,
 - ▲▲▲▲▲는 ‘△△ NEW ▢▢▢▢ 9M 1호’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, 레버리지,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·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△△ ▢▢▢▢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,
 -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○○○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△△ ▢▢▢▢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
-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,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,
 - ▽▽▽는 ▼▼ ◆◆◆◆ DLS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·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,
 -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·판매되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지배구조법」 제24조 제1항, 제3항
- 「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, 제4항
- 「지배구조감독규정」 제11조 제1항, 제2항, <별표2>